

## 세대균열과 세대연대\*

—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차별적 작용에 관한 연구 —

성 경 룡

(한림대 사회학과)

### [요약]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균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높은 수준의 평온한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국 여론조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치 영역에서는 이념성향과 대선후보 선택 등에 세대균열과 지역균열 등 균열변수가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책 영역의 경우, 젊은 세대와 다수 사회경제변수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병렬모델은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만간 갈등모델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히 바뀌고 있는 현실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병렬모델을 세대공생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재정적 측면의 세대정의 외에 청년세대의 공직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적 세대정의도 모색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위기 속에서 세대관계는 궁극적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신복지국가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주제어 : 세대균열, 세대연대, 세대양면성, 노인지배사회, 세대정의, 신복지국가

### 1. 연구 주제와 목적

2012년에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과정과 그 직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은 한국사

\*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RF-2013S1A5A2A03045488)을 받아 연구되었음.

회의 세대관계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주지하듯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주로 지역대결의 특징을 보였으나, 18대 대선의 경우 지역대결이 영호남 지역으로 축소되는 구조 속에서 세대대결이 선거경쟁을 주도하는 세대-지역의 이중적 균열구조가 등장했다 (성경룡, 2015). 이 구조 속에서, 청년세대(2030세대)와 노인세대(5060세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한 세대균열과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 선거에서 뚜렷한 진보적 이념성향을 견지한 청년세대의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협력 등 진보적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이에 반해, 강한 보수적 이념을 견지한 노인세대의 유권자들은 청년세대를 능가하는 인구규모와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다소 좁은 범위의 경제민주화, 선별적 복지 중심의 복지확대, 안보우선의 대북정책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박찬욱, 2013; 이내영·정한울, 2013)<sup>1)</sup>.

외환위기 이후 고용, 가정형성, 가족부양 등 여러 측면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온 청년세대는 구조적 개혁을 약속하는 진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충분한 노후준비 없이 노인세대로 진입한 베이비부머 집단들은 단기적 경기부양과 선별적 복지 제공을 약속하는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따라서 상이한 이념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두 거대 연령집단은 대통령선거라는 큰 정치경쟁의 장에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세대대결이 이처럼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을 때 대선 시기에 구조화된 세대균열이 당연히 새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세대균열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정부가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는 방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시기에 기초연금 공약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노인세대는 일부 단체의 반대성명을 제외하면 전세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또한 이념적 지향은 다르지만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예, 반값 등록금 공약)에 동의했던 청년세대들도 선거 후 새 정부가 이 두 공약을 거의 전적으로 폐기했을 때 뚜렷한 조직적 반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영역에서 세대균열이 뚜렷하게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대균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정반대로,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이 매일 조사하는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2012)가 18대 대선 직후에 조사한 서베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11점 척도에서 2030세대의 평균 이념 점수는 4.8점, 40대는 5.6점, 5060세대는 6.5점으로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보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F-검증에서  $p=.000$ ). 또한 동일한 자료에서 여러 정책 이슈 중 '복지확대'에 대한 관심도를 박근혜 후보 지지자와 문재인 후보 지지자로 나누어 보면 각각 평균 7.97과 8.22점으로 나타난다. 이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t=1.95$ ,  $p=.027$ ). 이것을 보면 치열한 선거경쟁 속에서 후보간에 정책수립 현상이 나타났으나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복지확대에 더 적극적인인지를 식별하고 선거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경우, 다른 어떤 요인보다 세대요인이 여전히 대통령 평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요인보다 세대균열 요인이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후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선호 결정 등 정치영역의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 세대균열 현상이 정책 영역, 특히 비용 부담과 혜택수혜를 둘러싸고 세대갈등이 크게 발생하는 사회정책 영역에서 뚜렷하게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권력을 탄생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정책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가? 아니면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 영역과 정책 영역에서 상이하게 반응하는 차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정치 영역과 정책 영역에서 상이한 기제, 즉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갈등적 세대균열(intergenerational cleavage) 기제가 존재하고,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친복지적 세대균열 기제와 안정적인 세대연대(intergenerational solidarity) 기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이한 기제를 작동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장차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더욱 빠르게 지속되어 고령인구의 비율이 청년과 아동의 비율을 크게 상회할 경우에도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연대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갈등적 세대균열이 확산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세대연대를 증진할 수 있는 한국 복지국가의 세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세대관계의 양면성

### 1)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 확산 현상

한국사회에서 발견되는 세대관계의 특이성 가운데 하나는 세대균열이 이념성향, 투표선택, 정부평가(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등 정치 영역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sup>2)</sup> 결과 분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그림 1>은 2030세대의 구성원들이 5060세대에 비해 더 진보적이고, 진보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도 더 비판적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반면, 5060세대는 더 보수적이고, 보수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대 구성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와

2) 이 조사는 지역, 세대, 성별 등을 고려하여 확률비례표집 방법에 따라 추출된 1,2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사회조사로서, 면접은 2014년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노인세대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주: 한국리서치(2014)의 자료 분석

〈그림 1〉 이념성향, 투표선택, 정부평가에서 나타나는 세대균열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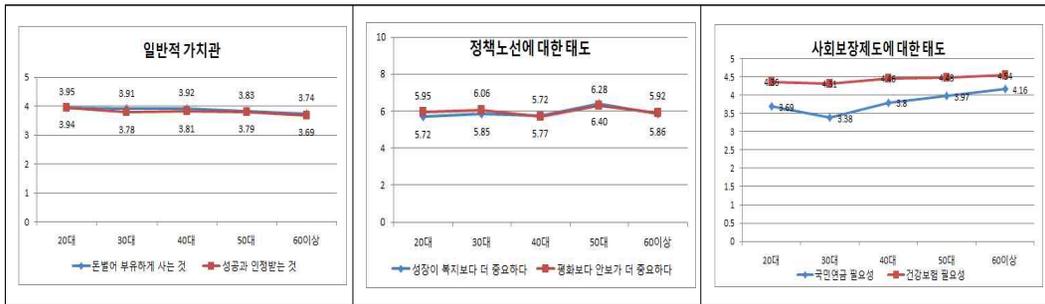
그런데 유의할 점은 〈그림 1〉에 제시된 분석결과가 18대 대선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행된 회고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직후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보다 투표선택의 경우에 이런 차이가 더 많이 나타난다. 한국리서치의 자료에 의하면, 2030세대 유권자의 44% 내외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응답했으나 대선 직후의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무려 65% 내외의 2030세대 응답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욱, 2013; 이내영·정한울, 2013). 5060세대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림 1〉의 분석에서는 청년세대의 대선후보 지지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관한 것이다. 한국리서치가 조사작업을 진행하던 2014년 1~2월의 시기에 박 대통령은 53~56%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한국갤럽, 2014). 그러나 측근들의 국정개입 논란과 연말정산 파동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2014년 연말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급격히 하락하였고, 메르스 사태가 악화된 2015년 6월 하순에 이르러서는 긍정평가가 29%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2015). 이것을 보면 집권 초기에 비해 최근에 들어와 국정수행 평가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2030세대의 긍정 평가는 10% 초반대에, 40대는 10% 후반대, 5060세대의 긍정 평가는 40~60%대로 나뉘어 세대별 지지 패턴이 대선 시기보다 크게 양극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상의 자료들을 통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세대균열은 이념성향, 투표선택,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등 정치 영역의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또 깊게 존재하고 있다. 둘째, 정치 영역의 이런 세대균열은 18대 대선 시기에만 국한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선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도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 2) 가치관과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수렴 현상

한국사회의 세대관계에서 발견되는 다른 특이한 점의 하나는 정치 영역의 강한 세대균열 현상과 달리 일반적 가치관이나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간에 가치관과 정책태도의 수렴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세대의 응답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와 '크게 성공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각 5점 척도의 문항에 대해 대체로 4점에 가까운 응답을 보임으로써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라는 일반적 가치관에서 서로 매우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기할 것은 Inglehart(2008)류의 탈물질주의 이론과 상반되게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세대들이 평균적으로 노인세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수준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가치관을 보인다는 점이다.



\* 주: 한국리서치(2014)의 자료 분석

<그림 2> 가치관과 정책영역의 세대균열 수렴 (세대연대) 현상

한편 여러 세대집단들은 정책노선과 관련한 기본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장이 복지보다 중요하다'와 '평화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각 10점 척도의 문항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6점 근처의 선택을 함으로써 복지보다는 성장을, 평화보다는 안보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다소 물질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정책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여러 세대의 응답자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동의를 보여주고 있다(5점 척도에서 4.5점 내외). 다만 국민연금 제도의 경우, 청년세대보다 노인세대의 동의가 다소 많으나 30대 응답자를 제외할 경우 전체적인 동의 수준은 평균 3.9점 내외에서 근소한 차이만을 보인다.

이러한 발견들은 이념과 정치 영역에서는 극심한 세대균열이 분출하고 있지만, 가치관과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놀랍게도 세대간에 광범위한 동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현상은 격렬한 정치적 세대균열의 이면에 세대공감과 세대연대의 안정적 태도 기반이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박근혜 정부가 집권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 핵심 정책공약을 상당 부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세대집단들이 상호 충돌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를 이

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여러 세대의 구성원들이 가치관과 정책태도에서 높은 동의를 보였다는 것 외에 세대 상호간의 평가에서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표 1>은 각 세대들이 자신과 다른 세대의 구성원들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또 그들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표에 의하면 주목할 만한 차이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눈에 띄는 것은 2030세대에 대한 5060세대의 불만이 평균치보다 약간 높다는 것이지만, 이들은 2030세대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 평균에 가까운 응답을 보임으로써 상호간에 큰 갈등으로 번질만한 불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30대의 경우, 4050세대와 60대 이상 세대에 대해 평균치를 넘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이들 집단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데 대해서는 평균치 수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역시 이들 사이에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는 불만을 찾아내기 어렵다.

<표 1> 세대 상호간의 평가 (5점 척도)

응답자	2030세대에 대한 태도		4050세대에 대한 태도		60대 이상에 대한 태도	
	불만	한국발전 기여	불만	한국발전 기여	불만	한국발전 기여
20대	2.37	3.22	2.42	3.82	2.37	3.77
30대	2.52	3.07	<b>2.60</b>	3.76	<b>2.51</b>	3.79
40대	2.68	3.94	2.46	3.75	2.38	3.82
50대	<b>2.81</b>	2.98	2.38	3.78	2.28	3.88
60대 이상	<b>2.78</b>	3.04	2.33	3.76	2.22	3.97
평균	2.64	3.06	2.44	3.77	2.35	3.85

\* 주: 한국리서치(2014)의 자료 분석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사회의 세대관계는 정치 영역에서는 세대균열이 강력하게 확산되어 있는 반면, 가치관과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균열이 현저히 수렴되어 세대연대의 구조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현상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세대관계가 세대균열과 세대연대의 양면성을 띠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3.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 1) 기존연구 검토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세대관계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대결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조화로운 것이

아니다. 현실 속의 세대관계는 세대균열과 세대연대의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이념과 투표 연구에 집중해온 정치학계의 세대 연구는 세대관계의 양면성을 통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주로 세대균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온 것이 사실이다.

먼저, 세대관계를 갈등적 측면에서 이해하며 이념성향, 투표행동, 정부평가 등 정치 영역의 특징을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2000년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균열구조가 지역균열 중심의 단일적 대결구조에서 새롭게 세대균열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원적 대결구조로 점진적으로 진화해왔음에 주목한다(윤상철, 2009; 이내영·정한울, 2013). 이런 관점에서 Kang(2008)과 장덕진(2008)은 노인세대와 다른 시대적 배경에서 성장한 청년세대들이 자유주의, 반권위주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지역균열을 능가하는 새로운 세대균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한다.<sup>3)</sup> 김정훈(2013)은 오늘날의 2040세대는 성장과정에서 민주화와 정보화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대균열이 18대 대선에서 강렬하게 분출된 것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임을 강조한다. 노환희·송정민(2013)과 오현주·길정아(2013)는 세대균열이 이념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임을, 그리고 박원호(2013)는 세대균열이 정당일체감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임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청년세대와 노인세대가 상이한 가치관, 이념, 정당일체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 투표선택의 차이로 귀결된다. 김정훈(2013), 이내영·정한울(2013), 노환희·송정민(2013) 등 여러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18대 대선에서 민주적 가치관과 진보적 이념을 가진 2030세대들이 진보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집중적으로 지지했고, 이에 반해 권위적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을 가진 5060세대들은 보수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음을 밝혀내었다.

세대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은 균열투표(cleavage voting)의 한 현상인데, Toka(1998)와 Bornshier(2009) 등에 의하면 이 균열투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한다. 즉 균열투표는 특정 균열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투표(structural voting)와 동일 균열구조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따라 투표하는 가치투표(value voting)의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한편, 그것과 더불어 특정 균열구조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조직적 결속과 정당의 동원에 의해 투표하는 조직투표(organizational voting)의 특성도 가지므로 매우 강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세대투표는 세대별 구조투표와 가치투표의 속성을 포함하면서 세대내의 결속과 정당 동원에 의한 조직투표의 요소까지 두루 갖춘 균열투표의 특징을 모두 보인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투표유형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균열의 효과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환희·송정민(2013)과 김정훈(2013)은 성장기의 경험과 정치사회화에 기반한 동년배효과(cohort effect)가 세대간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준한(2013)은 2007년과 2012년의 두 대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령의 증가

3) 장덕진(2008)의 주장과 본 논문의 <그림 2>가 보여주는 내용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불일치는 청년세대의 상대수가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의 상반된 가치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청년의 다수는 여전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타 세대에 비해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 발생했을 수 있다. 이 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 6>을 참조하라.

에 따라 보수성이 증가하는 연령효과(aging effect)가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이념 차이 및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sup>4)</sup> 이러한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이내영·정한울(2013)은 18대 대선에서 2040세대의 경우에는 진보적 이념을 유지·강화시키는 동년배 효과가, 5060세대의 경우 이념적 보수화를 증가시키는 연령효과가 동시에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1일 단위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갤럽(2015)과 리얼미터(2015)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이후 대략 1년 반 이상 50~60% 사이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세대균열이 대선 시기의 선거경쟁은 물론 그 이후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균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간 정치학계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진행된 연구는 세대균열이 이념성향, 투표선택, 정부평가 등 정치 영역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대균열이 일반적 가치관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얼마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18대 대선에서 격렬하게 분출된 세대균열이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는 지금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집단의 정치적 발언권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앞으로 노인세대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하는 정책결정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부담을 지게 될 청년세대와의 세대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노인지배사회'(gerontocracy) 가설(Berry, 2012; Tilley, 2014)이 적어도 현 시기까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설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치관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발견되는 뚜렷한 세대균열의 부재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은 바로 세대연대론(intergenerational solidarity)이다. 세대연대론은 세대관계, 특히 가족내의 세대관계는 애정, 신뢰, 호혜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경쟁적·대립적 관계보다는 협력적·공생적 관계가 더 일반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Bengtson and Oyama, 2007; Szydlik, 2008). 가족내 세대관계가 세대갈등보다 세대연대의 특징을 더 많이 띠게 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세대들이 정서적 연대(affectional solidarity: 친밀한 관계), 접촉적 연대(associational solidarity: 대면·비대면 접촉), 기능적 연대(functional solidarity: 금전적·비금전적 원조의 제공), 규범적 연대(normative solidarity: 상호부조와 부모 돌봄의 의무감), 동의적 연대(consensual solidarity: 가치·의견상의 일치), 구조적 연대(structural solidarity: 가족 수, 공간적 인접성)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높은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Bengtson and Oyama, 2007).

이러한 세대연대 현상은 실제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Kingston 외(2001)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세대연대 현상이 세대갈등 현상보다 더 일반적이고, 현실에서 세대연대의 핵심 요소는 정서적·기능적·접촉적 연대이며, 규범적 연대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Szydlik(2008)도 세대갈등보다 세대연대가 더 뚜렷하고 지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

4) 이준환(2013)은 모든 세대에서 보수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나 노인세대의 보수화 정도가 청년세대보다 훨씬 더 컸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조한다. Meil(2011)은 급격한 탈산업화와 개별화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형태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가족 구성원간에 높은 수준의 접촉과 정서적 교류, 강한 규범적 연대와 기능적 연대를 통해 견고한 세대연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탈산업화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유럽과 북미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간에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역시 높은 수준의 동의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보고되고 있다. Duffy 외(2013)는 유럽 지역에서 복지국가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세대와 노인세대 사이에 복지에 대한 높은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MacArthur Foundation(2012)은 미국과 유럽지역에서 전통적 가족의 약화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동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처럼 높은 수준의 세대연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은퇴자에 비해 은퇴자들이 연금 이외의 다른 복지 지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발견은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Busemeyer et al., 2008).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은퇴자와 비은퇴자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균열이 결국 여러 사회정책 분야에서 세대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북미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연대 논의는 아직 일천하다. 우선 그동안 한국 학계에서는 세대연대에 관한 연구가 세대연대의 여섯 가지 차원 중 주로 규범적 연대, 즉 가족주의와 효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 진행되었다. 이승환(2004)과 이성용(2006) 등은 모두 개인보다 가족을 더 중시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가족주의적 규범이 가족내 세대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연구는 이명호(2013), 정현숙(2013), 최유석 외(2015) 등의 연구이다. 이들은 모두 한국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세대연대를 유지시키는 요소는 규범적 연대 외에 정서적 연대와 기능적 연대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장경섭 외(2013)는 부모 돌봄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복지정책이 전통적 가족주의를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제도적 가족주의로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세대연대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것 외에 세대연대와 정책태도, 특히 사회정책 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일천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대연대가 사회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선거 때 격렬하게 나타났던 세대균열이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잠잠해지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연구가설: 세대양면성의 관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여러 세대집단들이 선거 시기와 그 이후, 나아가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보이는 차이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세대관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 즉 세대양면성(inter-generational ambivalence)의 관점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관점은 일반적으로 세대관계가 갈등과 연대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는데, 다만 어떤 특징이 어떤

조건에서 더 발현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한 시기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Kingston, et al., 2001; Hogerbrugge and Komter, 2012). 이런 인식하에, 본 연구는 세대관계의 갈등적 측면과 연대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세대양면성의 관점을 취하되, 분석전략으로서는 세대균열 변수와 세대연대 변수를 동일 회귀분석 함수에 포함하여 각각의 효과를 검증하는 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sup>5)</sup>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이념성향, 투표선택, 정부평가 등의 정치 영역에서는 세대균열 효과가 세대연대의 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민주화 이후 지역균열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3김 퇴장 이후의 첫 대선이었던 2002년 16대 대선부터 동시에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세대균열, 이념균열, 그리고 정치적 선택이 서로 강력한 친화성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강원택, 2003; Kang, 2008). 여기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2030세대가 자유주의적·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폭넓게 받아들이면서 권위주의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깊게 내면화한 5060세대와 정치적으로 쉽게 화해할 수 없는 세대간 이념적 대립 전선을 형성한 것이 그 배경이 되었다<sup>6)</sup>. 세대균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대집단을 20대, 30대, 40대(기준), 50대, 60대의 다섯 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세대연대 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벵트슨·오야마(Bengtson and Oyama, 2007)가 제시한 세대연대의 여섯 가지 차원 중 한국사회에서 적실성이 높은 규범적 연대, 기능적 연대, 정서적 연대의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정치적 세대갈등(노인층이 많아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현상)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념성향은 더 진보적이며, 박근혜 후보를 덜 지지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측면의 다른 변수인 지역균열 변수의 경우 충청권 유권자에 비해 영남 지역 유권자들이 더 보수적이고,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해 더 우호적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호남 유권자들은 정반대의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가계부채 정도, 임금노동자 여부 등이 정치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소득과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것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위층으로 갈수록,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비임금노동자에 비해 임금노동자일 경우 보수적 이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대선에서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할 것이며,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대해 더 우호적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종교 유무, 이념성향(투표선택과

5) 세대관계의 양면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른 전략은 한 개인이 다른 세대 구성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호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의 양가적 태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그것이 개인의 삶(예,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Lowenstein, 2007 참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비로 이 분석전략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6) <그림 2>에서 발견되는 청년세대의 높은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 가치관은 노인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년세대 중에서도 고등교육을 받고 사무직과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장덕진, 2008). 나은영과 차유리(2010)는 서베이 조사에서 탈물질주의자의 비율이 20대 13.5%, 30대 6.0%, 40대 3.5%, 50대 4.0%로 2030세대의 비율이 타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평가 분석시)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한편 정책 영역, 즉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정책의 네 분야인 노후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장, 재정 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다소 상반된 가설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는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사회보장 정책의 성숙 또는 확대에 의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세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노인세대보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정치 영역에서 살펴본 세대갈등과 일치하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균열 효과의 검증을 위해서는 세대집단을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 다섯 개 집단으로 나누는 대신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와 46세 이상의 장노년 세대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분석전략을 채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모두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높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어 그 변이의 범위가 매우 좁다. 둘째, 세대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난 16대 대선과 18대 대선에서 진보와 보수 후보 지지에 대한 경계선이 모두 45세로 나타났다(성경룡, 2015).<sup>7)</sup> 이런 이유로 세대집단을 5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2개 정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의 가설은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세대연대 의식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더 우호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세대연대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설령 더 많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사회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대연대는 규범적 연대, 기능적 연대, 정서적 연대의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가설검증을 하고자 한다.

세대 요인 외에 정치적 세대갈등,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의식, 가계부채 정도, 임금노동자 여부 등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측면의 여러 변수들도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과 이익 계산에 기반을 두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 정치적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이 적을수록, 지역계층 구조에서 하위에 속하는 호남권과 강원·제주 지역,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하위층에 속할 경우,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비임금 근로자일 경우 본인의 기여보다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노후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장 등 주요 사회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많고, 재정부담을 위해 청년세대의 재정부담을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정치 영역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제변수로는 성별, 종교 유무, 이념성향 등을 고려하고자 하는데, 이념성향의 경우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이념 소유자일수록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그리고 청년세대의 재정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우호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7) 2002년 대선의 경우 40대 중 45세 이하 집단과 이후 집단의 노무현 후보 지지는 48.9% 대 45.1%, 45세 이하 집단과 이후 집단의 이회창 후보 지지는 46.5% 대 52.2%로 나타나 45세가 세대균열의 분수령이었던 것을 보여주었다(이내영·정한울, 2013). 2012년 대선의 경우 40대 중 45세 이하 집단과 이후 집단의 문재인 후보 지지는 59.4% 대 52.8%, 박근혜 후보 지지는 38.1% 대 46.5%로 나타남으로써 이 패턴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2년 대선 후 조사자료 분석).

## 4. 경험적 분석

### 1) 자료와 분석방법

3절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리서치가 2014년 초에 실시한 전국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 분석에서 사용할 종속변수의 지표와 척도는 <표 2>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 표에서는 두 종류의 종속변수를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대균열과 세대연대가 두 영역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표 2> 두 영역의 종속변수와 측정

정치 영역의 종속변수	사회정책 영역의 종속변수 (5점 척도를 더미변수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념성향: 10점 척도 (0=진보, 10=보수)</li> <li>● 투표선택(18대): 박근혜 지지(1), 문재인 지지(0)</li> <li>● 박근혜 정부 평가: 국정운영 잘함(1), 잘못함(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보장: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정부책임 크다=1, 중간 및 적다=0)</li> <li>● 의료보장: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정부책임 크다=1, 중간 및 적다=0)</li> <li>● 실업보장: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보장 (정부책임 크다=1, 중간 및 적다=0)</li> <li>● 청년세대 부담 반대: 노인 복지를 위해 젊은 세대의 세금을 늘려서는 안 된다 (동의=1, 중간 및 반대=0)</li> </ul>

<표 3>은 두 종류의 분석에서 사용할 독립변수를 구조적 변수(세대변수와 지역변수 등), 사회경제 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영역과 정책 영역의 분석에 동일한 독립변수군(群)을 사용함으로써 각 변수들이 두 영역에서 어떻게 유사하게, 또는 상이하게 작용하는지를 비교할 예정이다.

<표 3> 독립변수와 측정

변수		지표와 척도
구조적 변수 ● 세대변수 ● 지역변수	세대균열	정치 영역: 20대, 30대, 40대(기준), 50대, 60대 이상 집단 더미 사회정책 영역: 45세 이하 집단(1), 이후 집단(0)
	세대연대	규범적 연대: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와 상관없이 부모님께는 잘 대해 드려야 한다” (매우 반대 1점 - 매우 동의 5점) 기능적 연대: “나는 부모님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 (매우 반대 1점 - 매우 동의 5점) 정서적 연대: “나는 부모님과 친밀하게 느낀다” (매우 반대 1점 - 매우 동의 5점)

변수		지표와 척도
	정치적 세대갈등	“노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에서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매우 반대 1점 - 매우 동의 5점)는 문항에 대한 응답
	지역(더미)	충청권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제주권 더미 변수
사회경제변수	최종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이상
	월평균 개인소득	99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6개 등급)
	주관적 계층의식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층
	가계부채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있다, ③ 부담 줄 정도로 많다
	임금근로자 여부	임금근로자(1), 비임금근로자(0)
통제변수	성별	여성(1), 남성(0)
	종교	있음(1), 없음(0)
	진보이념	진보이념 보유 (1), 그 외 (0): 진보(10점 척도에서 0~4까지)
	보수이념	보수이념 보유 (1), 그 외 (0): 보수(10점 척도에서 6~10까지)

3절에서 제시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만, 10점 척도로 되어 있는 이념 문항에 대해서는 선형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 2) 분석결과

정치 영역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예상대로 40대에 비해 5060 세대의 경우, 정치적 세대갈등을 덜 느낄수록, 충청권 거주자에 비해 영남권과 강원·제주권 거주자의 경우 더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학력이 높고 개인소득이 많을수록 보수성향은 줄어들고, 반대로 진보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연대 변수는 이념 성향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패턴은 18대 대선에서의 박근혜 후보 지지와 선거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도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40대에 비해 5060세대의 경우, 정치적 세대갈등의 심각성을 덜 느낄수록, 영남권과 강원·제주권 거주자일 경우, 보수적 유권자일 경우 박근혜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박근혜 정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학력과 개인소득의 효과는 사라지고 있으며, 그 대신 주관적 계층(박근혜 후보 지지의 경우)과 가계부채라는 사회경제변수, 종교 요인(박근혜 후보 지지의 경우), 그리고 진보와 보수 이념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예상

치 않게 세대연대 변수 중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규범적 연대 변수가 박근혜 정부의 평가에 긍정적으로, 이와 달리 기능적 연대 변수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변수 중 개인소득과 임금근로자 여부 등은 정치 영역의 종속변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의 예외는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보수적 성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표 4〉 정치 영역에 대한 선형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one-tailed test)

독립변수 \ 종속변수	이념 (선형 회귀분석)	박근혜 후보 지지	박근혜 정부 평가	
구조적 변수	20대	-.313*	-.264	-1.442***
	30대	-.139	-.550**	-.771***
	50대	.309**	.151	.316*
	60대 이상	.940***	.816**	.631**
	규범적 연대	.010	.051	.554***
	기능적 연대	.058	-.031	-.208*
	정서적 연대	-.011	-.010	.055
	정치적 세대갈등	-.177***	-.212**	-1.193**
	수도권	-.010	-.025	.442*
	영남권	.387**	.974***	.560**
	호남권	-.617***	-2.682**	-1.533***
	강원제주권	.702**	.717*	.708*
사회경제변수	최종학력	-.221**	-.114	.095
	월평균 개인소득	-.088**	-.009	-.036
	주관적 계층	.032	.236**	-.024
	가계부채	-.054	-.366***	-.259**
	임금근로자	-.042	-.242	.012
통제변수	성별(여성=1)	-.075	.090	.148
	종교(유=1)	.083	.826**	.143
	이념(진보=1)		-1.218***	-.411**
	이념(보수=1)		.771***	.286*
상수	6.245***	1.118	-1.635**	
사례수, 설명력	N=836, R-sq=.138	N=742, Nagelkerke R-sq=.434	N=836, Nagelkerke R-sq=.252	

\* 주: \*\*\*( $p < .001$ ), \*\*( $p < .05$ ), \*( $p < .10$ )

한편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4대 영역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정치 영역의 회귀분석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령인구 증가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에 따라 지속적으로 많은 재정부담을 지게 되는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예상과 달리 의료보장과 실업보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 집단은 노후보장과 청년세대의 부담증가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면, 45세 이상의 장노년세대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데 반해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는 오히려 그것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사회연대를 증진하고 사회정책 영역에서 세대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젊은 세대 스스로 해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one-tailed test)

독립변수 \ 종속변수	노후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장	청년세대 부담 반대	
구조적 변수 (세대변수, 지역변수)	45세 이하 세대	-.130	.292**	.266*	.169
	규범적 연대	.206**	.146*	.307***	.145*
	기능적 연대	.158*	.180*	.158*	-.264**
	정서적 연대	.059*	.050	.011	-.018
	정치적 세대갈등	-.080**	-.059	.042	.282***
	수도권	.645***	-.038	.025	.403**
	영남권	.912***	.688***	.062	.340*
	호남권	.647**	.277	.689**	.315
	강원제주권	1.176***	.261	.312	.067
사회경제 변수	최종학력	.483***	.038	.155	-.057
	월평균 개인소득	-.115**	-.134**	-.129**	.018
	주관적 계층	-.016	-.063	-.037	-.005
	가계부채	-.330***	-.339***	-.057	.107
	임금근로자	-.137	-.003	.063	-.057
통제변수	성별(여성=1)	-.390***	-.210*	-.262*	.245*
	종교(유=1)	-.238**	-.182*	-.220*	.271**
	이념(진보=1)	-.111	.026	-.010	.105
	이념(보수=1)	-.238*	.074	-.034	.220*
상수	-1.932***	-.385	-2.688***	-1.289**	
사례수, 설명력	N=836, Nagelkerke R-sq=.084	N=836, Nagelkerke R-sq=.080	N=836, Nagelkerke R-sq=.059	N=836, Nagelkerke R-sq=.051	

\* 주: \*\*\* (p<.001), \*\* (p<.05), \* (p<.10)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대략 다음 세 가지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표 4>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재분배를 지지하는 이념적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노인세대보다 학력수준이 높은 젊은 세대들의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다. 셋째는 의료보장이나 실업보장 등 중요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젊은 세대 자신이나 부모세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큰 경제적 부담이 모두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출산율의 감소에 따라 젊은 세대의 구성원들이 자신과 자녀, 그리고 부모세대 모두를 챙겨야 하는 상황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하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세대연대 변수의 효과이다. 세대연대 변수들은 정치 영역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정책 영역에서는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대연대 변수 중에서도 규범적 연대 변수는 노후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장 등 주요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으나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규범적 연대의 효과가 미약한 유럽과 여타 국가들의 경우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다.<sup>8)</sup> 기능적 연대 변수는 세 가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고, 또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능적 연대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부모봉양을 위한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적 연대 변수는 노후보장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세대연대의 효과와 달리, 정치적 세대갈등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노후보장과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하게도, 충청권 지역 거주자와 비교하여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노후보장에 대해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나 최근 기업 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충청권의 경우 젊은 세대의 인구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여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짐작된다. 사회경제변수 중 월평균 개인소득의 증가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러 분야의 사회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정책이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관적 사회계층 의식은 회귀계수의 방향이 예상했던 것과 동일한 방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가계부채는 예상과 달리 노후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업보장과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반대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회귀계수가 예측과 반대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재분배 효과가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한 문제해결보다 금리인하나 부채탕감 등과 같은 선별적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

8) Hogerbrugge와 Komter(2012)는 네덜란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에서 규범적 연대가 다른 형태의 연대에 전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밝혀내었다. 한편 Moor와 Komter(2008)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규범적 연대가 스페인과 같은 남부 유럽국가에서는 대체로 높으나 노르웨이 등 북서 유럽국가들에서는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했다.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통제변수 중 특이하게도 여성과 종교인들은 노후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장 등에 대해 일관되게 유의미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이들은 노인복지를 위한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것은 결국 여성과 종교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를 반대하는 강한 보수세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념변수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으나 보수이념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노후보장과 청년세대의 부담증가에 모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념적 진보성이 사회보장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이념의 효과를 젊은 세대가 이미 흡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별 정책 분야로 나누어 보면, 노후보장과 의료보장은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의료보장), 규범적 연대와 기능적 연대, 개인소득, 가계부채, 성별, 종교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실업보장의 경우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 규범적 연대와 기능적 연대, 개인소득, 성별, 종교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부담증가 반대에 대한 태도의 경우, 규범적 연대 변수는 긍정적 작용을 하지만 기능적 연대 변수는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기할 점은 정치적 세대갈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과 수도권 거주자들, 여성, 종교인, 그리고 보수이념 소유자들이 모두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에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세대갈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은데(〈표 4〉 참조), 이들은 노인복지의 증가로 인해 청년세대의 부담이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 종교인, 그리고 보수이념 소유자들과 예기치 않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예산의 증가에 반대하는 친청년 진보-보수 정책연합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토론

위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연구가설들을 대부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상했던 바와 같이 정치 영역에서는 18대 대선과정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세대균열이 이념, 후보선택, 박근혜 정부의 국정성과 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혜택 수혜를 둘러싼 세대간 균열이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은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45세 이하의 젊은 세대와 그 이후의 장노년세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젊은 세대들이 장노년세대에 비해 의료보장과 실업보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노후보장과 청년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사회정책 영역에서의 세대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젊은 세대의 진보적 태도, 높은 학력,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자신과 부모세대를 모두 부양하기 힘든 상황 등 세 가지들을 들 수 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단기적으로 합리적 선택, 즉 자

신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반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근시안적 판단에서 벗어나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를 통해 세대연대를 증진하는 능동적 태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향적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사회정책 영역에서 당연히 분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세대갈등을 완충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만약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주요 사회보장제도(특히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노인의료보장 확대 등)에 대해 반대한다면 정치 영역에서 시작된 세대갈등은 필연적으로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폭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으로써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갈등이 완충 내지 억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정책 영역의 세대갈등을 완충시켜주는 다른 요인의 하나는 본 연구에서 강조한 세대연대 요인이다. 서베이 자료를 분석해보면, 세대연대의 세 차원인 규범적 연대, 기능적 연대, 정서적 연대 의식은 5점 만점에 평균 3.7~3.8점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규범적 연대는 60대 이상 집단에서, 정서적 연대는 20대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차이를 제외하면 세 가지 세대연대 의식이 전 연령집단에 걸쳐 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세대연대 의식은 연령집단의 경계를 넘어 폭넓게 확산되어 있고, 이것이 사회정책 영역에서 세대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우리는 앞서 살펴본 젊은 세대의 친복지적 태도와 한국사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세대연대 의식이 세대갈등의 이중적 측면, 즉 정치 영역에서는 격렬한 세대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세대갈등이 완화 또는 억제되는 수수께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열쇠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확인된 다른 중요한 발견의 하나는 사회경제변수가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의 태도결정에 공통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선거연구에서 주로 부각된 결정 요인은 지역과 세대 등 균열구조 요인이었으며, 사회경제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결여하거나 계급배반투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론적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를 많이 산출하였다(고원, 2013; 강원택, 2013).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변수 중 특히 가계부채 변수가 정치 영역과 사회정책 영역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가계부채는 대선 후보 지지와 정부평가 등 정치 영역, 나아가 노후보장과 의료보장 등 사회정책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가계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선택방향을 정치 영역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정책 영역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계부채를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감세 등 보수적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박근혜 후보와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사람들일수록 국가재정이 노후보장과 의료보장처럼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보편적 복지에 사용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절박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별적으로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결국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매우 일관된 판단과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다른 집단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은 사람들과 월평균 개인소득이 많은 사람들이다. 먼저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으로 갈수록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지지하였다(전병유·신진욱, 2014). 사회정책에 대한 이들의 태도도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지만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표출되었다. 개인소득의 경우, 이념성향, 후보선택, 정부평가에서는 진보적 경향성을 보였으나 사회정책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유의한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특이하게도 정치적 진보성과 사회경제적 보수성 사이의 이념적 분열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정책에 관한 한 분명한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경제변수가 정치 영역은 물론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앞으로 선거 때마다 복지와 분배를 둘러싼 사회정책 이슈가 유권자의 관심을 끄는 중심 이슈로 부각되면 점차 지역균열과 과도한 이념균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가계부채, 개인소득, 주관적 계층의식과 같은 사회경제변수, 그리고 이들 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세대균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5. 결론

본 연구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세대관계가 갈등적 측면과 연대적 측면의 뚜렷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세대균열이 이념성향과 정치적 선택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예측과 달리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보다 더 친복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고, 또 다수의 국민들이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강한 세대연대 의식을 폭넓게 공유함으로써 세대갈등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런 큰 틀 속에서 이념과 정치 영역에서는 세대균열 외에 지역균열과 이념균열 등 균열구조 요인이 여전히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개인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등 사회경제변수가 미약하게나마 새로운 영향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와 개인소득은 재분배 기제가 작동하는 사회정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정책 분야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과 종교인이 정치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이 같은 여러 중요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들이 갖는 한계도 분명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모든 경험적 분석이 그러하듯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측정하는 측정치 또는 지표들이 각 변수들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는 늘 문제가 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와 독립변수 중 세대연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자료의 제약상 규범적 측면에 치중한 지표들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향후의 연구에

서 좀 더 적절한 지표를 사용하여 새롭게 분석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대관계의 양면성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정치 영역에서는 세대균열 기제가,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젊은 세대의 친복지적 태도에 기반한 세대연대 기제가 병렬적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둘째,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이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산되어 이 영역에서도 세대갈등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셋째, 거꾸로, 사회정책 영역에서 세대연대가 강화되어 정치 영역에서의 세대균열을 약화시키고 두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세대공생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이 세 가지를 각각 병렬모델, 갈등모델, 공생모델로 부른다면, 현 단계에서 예상되는 가장 가능성이 큰 경우는 세대균열과 세대연대의 관계가 병렬모델에서 갈등모델로 이행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현재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세대균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세대공생적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주지하듯,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연금 확대와 무상보육 확대 등 복지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복지확대에 따른 증세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공약의 대폭적 축소 조정이 이루어졌다. 특이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정책 영역에서 당장 해당 세대들의 조직적 반발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균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복지의 정치화' 현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데(성경룡, 2014), 새로 등장하는 정부마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위반하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등장할 새 정부들은 어떻게든 세금과 복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어느 세대가 더 많은 재정부담을 하게 되고 어느 세대가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가를 둘러싸고 현재 사회정책 영역에서 잠복하고 있는 세대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대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구조가 빠르게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인구구조는 이미 4050세대의 인구비중이 타 세대보다 더 큰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지만, 2060년경이 되면 6090세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극단적 역피라미드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통계청, 2011).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인부양인구가 2010년의 15.2명에서 2060년의 80.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국가재정과 가족소득 중 엄청난 규모의 지출이 연금과 노인 돌봄 등 노인복지를 위해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노인세대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선거와 정책결정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력이 급속히 늘어나 머지않아 노인지배사회가 도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점차 소수화하는 청년세대의 저항으로 세대간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차 예견되는 상황이 이러하므로 병렬모델을 공생모델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즉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이 사회정책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악화될 수도 있는 세대균열을 줄이고 세대공생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련의 정책을 채택하여 역으로 정치 영역의 세대균열까지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그 결과는 파국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대공생 모델로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1.2명 정도의 출산율을 인구대체율인 2.1명에 최대한 근접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정책들, 예컨대 취업촉진, 출산지원, 공공보육, 주거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가하는 복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청년세대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적 세대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확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Vanhuyssse, 2013). 이를 위해 중상위계층과 대기업의 조세부담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충당할 경우, 인구감소로 인해 정치적 취약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이 실업과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약탈당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상 문제는 마지막에 고려되어야 할 조세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인구구조를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적정 재정지출 규모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세대회계론(generational accounting)의 관점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바가 있다. 세대회계론은 그동안 인구구조 변동과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복지지출의 확대 등과 관련하여 세대간 재정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관점과 세대간 상호의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Williamson and Rhodes, 2011). 이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할 때,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에 따라 심화되는 세대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재정적 세대정의를 이루고(유근춘, 2014), 동시에 세대간 상호의존성과 세대연대를 공고히 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정적 측면 외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세대정의가 모색되어야 한다(Berry, 2012). 수적으로 압도적인 노인세대가 투표결과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노인지배체제가 등장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의회진출과 공직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결정에는 사전에 세대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다. 나아가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겪게 될 고통을 쟁점화하고 공적 의제화하기 위해 정부, 국회, 정당 등에 미래세대위원회 같은 것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격렬한 세대균열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가 머지않아 인구붕괴의 위험과<sup>9)</sup> 더불어 극단적 형태의 세대분열과 사회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사회 전체가 이 신호를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면 앞으로 심화될 세대균열과 갈등을 완화하는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은 우리에게 인구감소와 세대균열, 나아가 인구붕괴와 사회경제적 붕괴 가능성의 신호를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세대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결국 장기적으로 인구위험과 세대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이런

9) 국회입법조사처(2014)는 출산율 1.19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120년 후에는 인구수가 1000만명, 2172년에는 500만명, 2503년에는 인구 1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2750년에는 한국에서 인구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위험에서 벗어나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신복지국가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을 실천하고, 동시에 세대정의와 세대연대를 증진하는 세대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세대요인: 세대, 이념과 이슈”, 『한국의 선거정치』,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13, “사회계층과 투표선택”,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과주: 나남.
- 고 원, 2013, “정치균열의 전환과 2012년 대통령선거: 세대와 계층 변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88: 143-171.
- 국회입법조사처, 2014, 『대한민국 인구변화』 분석보고서.
- 김정훈, 2013, “18대 대선의 의미와 진보의 재구성: 파국적 균형을 넘어서”, 『경제와 사회』, 97(봄호): 121-154.
- 나은영·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노환희·송정민, 2013, “세대균열에 대한 고찰: 세대효과인가, 연령효과인가?”,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과주: 나남.
- 리얼미터, 2015. 6. 22, “Press Release”.
- 박원호, 2013, “세대론의 전환: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박찬욱·김지윤·우정엽 편, 『한국 유권자의 선택 2: 18대 대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박찬욱, 2013, “2012년 대통령선거의 특징”,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과주: 나남.
- 성경륜, 2014,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한국사회학』, 48(1): 71~132
- 성경륜, 2015, “이중균열구조의 등장과 투표기제의 변화: 18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9(2): 193~231.
- 오현주·길정아, 2013, “유권자의 이념과 투표선택: 보수의 결집과 진보의 분열”,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과주: 나남.
- 유근춘, 2014,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 Issue & Focus』, 242: 1-8.
- 윤상철, 2009, “세대정치와 정치균열: 1997년 이후 출현과 소멸의 동학”, 『경제와 사회』, 81: 61-88.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19(3): 39-83.
- 이명호, 2013, “가족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28: 359-393.
- 이성용, 2006, “가족주의와 효”, 『한국인구학』, 29(2): 215-240.
- 이승환, 2004, “한국 가족주의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변화가능성”, 『유교사상문화연구』, 20: 45-66.
- 이준한, 2013, “한국의 이념성향과 생애주기효과: 2007년과 2012년 대통령선거”, 『정치정보연구』, 16(2): 1-26.
-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3,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한국 가족주의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덕진, 2008, “한국의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보수를 말하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움 자료집.
- 전병유 · 신진옥,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한국에서 계층별 정당 지지와 정책 태도, 2003~2012”, 『동향과 전망』, 91: 9-48.
- 정현숙, 2013, “가족의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장으로서의 가족 재발견”,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13-4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2,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 .
- 최유석 · 오유진 · 문유진, 2015, “대학생의 세대연대 인식: 노인세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 논문.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 한국갤럽, 2014, “데일리 오피니언”, 제106호(2014년 3월).
- 한국갤럽, 2015,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 148호(2015년 1월), 167호(6월).
- 한국리서치, 2014, 『2014 고령사회 세대공생 실태조사』 .
- Bengtson, V. L., and Oyama, P. S., 200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strengthening economic and social ties”, *UN Background Paper*.
- Berry, B., 2012, *The Rise of Gerontocracy? Addressing the Intergenerational Democratic Deficit*. Intergenerational Foundation, www.if.org.uk.
- Bornschieer, S., 2009, “Cleavage politics in old and new democracies”, *Living Reviews in Democracy*. University of Zurich, Institute for Political Science.
- Busemeyer, M. R., Gorres, A., and Weschle, S., 2008, “Demands for redistributive policies in an era of demographic aging: The rival pressures from age and class in 15 OECD countries”, *MPIFG Discussion Paper 08/3*.
- Duffy, B., Hall, S., Pope, S., and O’Leary, D., 2013, “Attitudes of different generations to the welfare system”, *Joseph Rowntree Foundation Paper*.
- Hogerbrugge, M. J. A., and Komter, A. E., 2012, “Solidarity and ambivalence: Comparing two perspectives o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using longitudinal panel data”,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3): 372-383.
- Inglehart, R., 2008,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1970-2006: Postmaterialist values and the shift from survival values to self-expression values”, *West European Politics*, 31(1/2): 130-146.
- Kang, W. T., 2008, “How ideology divides generations: The 2002 and 2004 South Korean elections”,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2): 461-480.
- Kingston, P., Phillips, J., and Ray, M., 2001, “Conflict and ambivalence with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Oslo NOVA Report 14/01*.
- Lowenstein, A., 2007, “Solidarity-conflict and ambivalence: Testing two conceptual frameworks and their impact on quality of life for older family member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2B: S100-S107.
- MacArthur Foundation, 2012, “Intergenerational cohesion and the social compact”, *Policy Backgrounder*, November 2012.
- Meil, G., 2011, “Individualization and family solidarity”, “la Caixa” Foundation, *Social Studies Collection*, 32.

- Moor, N., and Komter, A., 2008, "Demographic changes,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well-being in Europe: A comparative approach", *MULTILINKS Position Paper*, April, 2008.
- Szydlik, M., 2008,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onflic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9(1): 97-114.
- Tilley, J., 2014, "Age significantly impacts on the choices that voters make at elections", *Democratic Audit Blog*, 28 Jan 2014.
- Toka, G., 1998, "Party appeals and voter loyalty in new democracies", *Political Studies*, XLVI: 589-610.
- Vanhuyse, P., 2013, "Intergenerational justice in aging societi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29 OECD countries", *European Centre Vienna* (Paper).
- Williamson, J. B., and Rhodes, A., 2011, "A critical assessment of generational accounting and its contribution to the generational equity debate", *International Journal of Ageing and Later Life*, 6(1): 33-57.

# Intergenerational Cleavage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 Differential Effects on Political Arena and Social Policy Realm –

Seong, Kyoungryung  
(Hallym University, Sociology)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Korea show very unique characteristics. In political arena, young and old generations clash each other intensely, while they maintain a high level of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policy real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generational cleavage plays a key role in affecting voting decision and evaluation of governmental performance. It also suggests that in policy realm, normative, functional, and affectional types of solidarity influence people's attitudes on social policies very strongly.

If the current government continues to neglect its promises for expanding welfare, the dual structure of generational cleavage in political arena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in social policy realm can soon be turned into a conflictual structure. Therefore, an active initiative to increase intergenerational justice should be taken in order to attain a long-term, sustainabl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coexistence.

Key words: generational cleavage, generational solidarity,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gerontocracy, intergenerational justice, new welfare state

[논문 접수일 : 15. 07. 18, 심사일 : 15. 07. 23, 게재 확정일 : 15. 09. 14]